우암학원 창학 71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제21730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3월 5일 2022년 4월 5일 화요일

시정 발목잡고 잇속 챙기는 '생떼 위원들'

'위원회 천국' 광주시, 237개 위원회 위원들의 기막힌 행태

위원회 절반 1년 6개월간 회의 안 열거나 단 한 차례만 열어
이권이 걸린 회의에서는 일정 바꾸고 인신공격에 막말까지

2021년 광주시의 한 위원회에서 활동하던 A위원은 위원회 관련 민간 업체 간부로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나 자진사퇴했다. A위원은 위원 선발 시점에만 관련 업무 종사자를 배제하는 규정이 있을 뿐 선정 이후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도덕성 논란 등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났다. A위원은 활동 당시에도 자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각종 이권이 걸려있는 주요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에 대립하는 위원들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퍼붓고, 발언중지 권한이 있는 위원장의 통제도 따르지 않는 등 막무가내식 행태를 부려 입살에 올랐다.

또 다른 위원인 B위원은 '생떼 전문위원'으로 통한다. 최근에는 30여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일정을 바꾸자고 우기는 바람에 담당 공무원 여럿이 진땀을 뺐다. B위원은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자 위원들이 모여있는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회의자료가 미흡하다"는 등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고, 시청 담당직원에겐 "회의 당일 갑자기 개인일정이 잡혔다. 회의일정을 연기하라"고 압박까지 했다.

A, B 두 위원의 공통점은 특정단체 추천위원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게 다른 위원들의 말이다.

또 다른 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화풀이성 공격을 하는 위원 때문에 위원회 자체가 엉망이 됐다.

해당 위원회를 맡았던 광주시 산하 기관의 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관련 사업이 종료된데 앙심을 품고 회의 때마다 '사업수준이 낮다'는 등 공격을 이어갔고, 결국 위원회 자체가 엉망이 됐다"며 "관련 업무 종사자의 위원 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위해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들이 겉돌면서 오히려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비전문 위원들의 자질 논란부터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남성 중심의 위원회 등도 수두룩해 혁신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1년 6월 말 기준 광주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모두 237개에 이른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전년 (220개) 대비 17개나 늘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 기준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100개(42%)에 이르고, 회의를 1회 개최한 위원회는 74개다. 73%에 이르는 174개 위원회가 6개월간 1회 이하의 활동을 한 셈이다.

기간을 확대해 2020년 1년간의 활동을 분석해 봐도, 위원회 4개 중 1개 꼴인 63개 위원회가 연간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겨우 한차례 회의를 연 위원회도 73개나 됐다.

범위를 더 확대해도 2020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1년 6개월간 회의를 한차례도 열지 않거나(41개), 한차례만 연(67개) 위원회도 전체의 절반인 108개나 됐다. 광주시는 처리할 안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위원모집 기준도 합리성과 전문성, 다양성 등이 반영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광주시는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위원이 50% 미만인 위원회는 135개(57%)에 이른다. 시는 일부 분야에서 여성 전문가수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지만, 여성 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위원회 수만 15개였다.

타 시도에는 없는 애매한 모집기준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엄격한 자격조건에 따른 전문가 선발이 대원칙이지만, 광주시는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명분으로 '(광주)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기타 조항을 마련해 비전문가 또는 특정이익이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 관계자가 위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 한 위원은 "다양한 의견 수렴은 위원회 상정 전인 사업 계획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위원회 회의는 전문가들이 모여 위원회 회의에선 민관에서 제(안)출한 계획 등에 대해 추가 의견을 내고 잘못한 점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정목적을 가진 일부 비전문가들이 들어와 회의 취지를 벗어나는 막말성 발언을 쏟아내는 사례 등도 있다"고 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전문가들이 비전문 위원 유입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위원회 활동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일부 부서에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라는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거리두기 완화 … 캠퍼스의 봄 사적 모임 10인 미만, 영업 제한 시간이 자정으로 완화되는 등 코로나 19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 첫날인 4일, 광주대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후 밝은 표정으로 교정을 나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윤석열 내각 광주·전남 인사 얼마나?

다음 주 중 윤곽 … "도덕성과 실력이 제1, 2 요건"

다음 주 중에는 윤석열 정부 내각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지역 민심은 능력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윤석열 당선인이 초대 내각에 광주·전남 인사들을 얼마나 발탁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김은혜 대변인은 4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이내에는 새 정부의 전체적인 내각에 대한 발표와 구상을 설명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무래도 윤 당선인의 이번 주 일정은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시간이 인선에 필요하므로 인선 몰입과 내각 구성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인선에 대해서는 도덕성을 겸비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국민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신뢰감 구축이 제1, 제2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그리고 국익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로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각 일정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보다는 경제부총리가 아무래도 먼저 발표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원팀'에서의 조각 하나가 총리가 마련됐고, 나머지 조각을 함께 맞추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경제부총리도 있고 금융위원장도 있고 비서실장도 그 안에서 함께 조율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가 조각에 대해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기본적으로 당선인과 총리 내정자가 함께 만나는 과정에서 장관 인선에 대해 스크리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 인선에 대한 의견 교환이 비교적 심도 깊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중간고사 때 코로나 확진 학생 대면시험 대신 '인정점' 적용

이달 중순부터 중·고등학교에서 1학기 중간고사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경우 대면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대신 '인정점'을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현행처럼 확진 학생의 경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인정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계속 적용하기로 시·도교육청과 협의했다"며 "학교 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3~5일간 시행하는데다 많은 학생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만큼 확진 학생의 대면시험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인정점은 학생의 이전 또는 이후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환산한 성적을 말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진정되면, 확진자 학생도 시험을 대면방식으로 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교육부가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